데스크 시각

野 신당 지지율 정체, 반전은 가능한가

장 필 수
정치부장

새정치민주연합이 출범한 지 2일로 정확히 1주일이 지났다. 126석의 민주당과 2석의 새정치연합은 지난달 26일 신당 창당방식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란 이름의 제1 야당이 됐다. 지난달 2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당 창당준비위원장이 전격 합당을 선언한 후 24일 만이자 새정치연합이 창당을 준비한 지 37일 만이다.

당시 여론은 엇갈렸다. 전국적으로는 부정적인 여론이 조금 높았다. 세력 규합이 쉽지 않은 상황을 감안할 때 현실적 선택이란 지적도 있었지만 '새정치'를 표방한 안철수 의원 측이 결국 '백기투항 했다'는 비판적인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과의 합당과정에서 결별한 윤여준 새정치추진위 의장은 홀홀단신으로 거대 야당에 들어간 안철수 의원을 가르켜 '호랑이 굴에 들어간 사슴'으로 비유했다.

그렇지만 호남의 여론은 비교적 우호적이었다. 전략적 제휴를 통한 현실적 선택으로 6·4 지방선거 승리와 궁극적으로는 2017년 대선에서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카드였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이 성사된 데는 '새 정치를 하겠다'는 공통된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구체적인 접점은 '기초선거 무공천'에서 이뤄졌다. 정당정치에서 후보를 내지않는 것은 전장에서 장수를 출전시키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전쟁을 포기할 정도로 어려운 결정이다. 그만큼 유권자로부터 박수를 받아야 할 일이다.

지역에선 '무공천' 긍정적

그런 만큼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무공천이 호남 유권자 입장에선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전통적으로 야당 텃밭인 호남에선 공천만 받으면 인물의 됨됨이에 상관없이 당선됐던 전례를 봤을 때 무공천으로 인해 인물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 탓이다.

무공천이 인지도가 높은 현직 단체장에 전적으로 유리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예비후보 간 단일화로 현직 단체장과 1대 1 구도를 만들 경우 공천의 폐해가 사라질 것이란 기대가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곳곳에서 예비후보 간 단일화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호남 유권자들의 무공천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에도 불구,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지지율은 합당 선언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통합선언 직후인 3월 첫째 주 호남 유권자들의 지지율은 51%까지 치솟았지만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꺾여 40%대 중반까지 내려왔다.

전국으로 넓혀보면 지지율 하락세는 더 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통합 선언 직후인 3월 첫째 주 31%이던 지지율은 둘째 주 30%, 세째 주 28%로 하락했다. 또 다른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여야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안철수 공동대표가 지지율 14.8%로,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22.0%)에게 큰 폭으로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안철수 지지율 하락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 하락 및 정체는 안철수 효과가 아직은 미풍에 그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반전의 계기는 무엇이 될까. 정답은 호남 민심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정치 역사를 볼 때 호남은 늘 지역구도를 떠나 전략적 선택을 해왔다. 여당에 계속 밀리기만 하던 민주당이 반전의 계기를 안철수 의원에게서 찾은 것은 바로 이런 호남의 정치 역사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호남 민심이 반전 지렛대

기초선거 무공천을 고수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있어 반전의 첫 시험대는 역설적으로 광역단체장 공천룰이 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략지역인 호남과 경기에 별도의 시·도지사 공천룰을 마련했다. 시·도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50% 반영하고 여기에 5000명에서 1만 명에 달하는 배심원들의 투표 50%로 후보를 선발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4년 전 지방선거와 비교해 볼 때 유권자들의 표심이 훨씬 많이 반영될 것으로 보여 그 왜곡은 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후보 공천이 당선으로 이어지는 틀을 한 번도 깨보지 못한 호남 입장에선 이번 지방선거의 유일한 공천 대상인 시·도지사 후보 선출이 공정하게 이뤄질 때 전국 흐름에서도 반전을 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호남 유권자들이 공천룰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빚어질지 모르는 편파적인 적용과 불협화음을 지켜보는 이유다.

/ bungy@kwangju.co.kr

은펜칼럼

2라운드를 준비하자

심 상 돈
동아병원 원장

다행이다.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할 수 있었던 파업이라는 방법을 쓰지 않고 싸움이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

지금까지의 싸움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낼 수는 없었지만 실제의 핵심 사안은 의료수가의 현실화다. 의료계는 의료수가 현실화에 목을 매다시피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이를 이해하려면 1977년 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된 그 시절로 돌아가서 살펴봐야 한다.

1977년은 우리나라가 수출 100억불을 달성 한 해다. 당시의 1인당 국민 소득은 1043달러였다. 이 정도의 국민 소득으로는 의료보험료를 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국민들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어 의료보험료를 징수 할 수도 없었다. 게다가 당시는 지금과 달리 월급을 계좌이체가 아닌 봉투로 받을 때라 보험료를 걷는 일도 어려웠다. 몰론 의료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수준도 매우 낮았다. 그래서 공무원과 대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먼저 시작했다. 그 당시 가입률은 10% 정도. 그로부터 12년 뒤인 1989년 7월 1일 도시 지역 의료보험이 시작되면서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시행 되었다. 다른 나라들의 의료보험 역사를 보면 일부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제도를 도입 한 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하기 까지 독일 127년, 벨기에 118년. 급속한 근대화를 이룬 일본도 37년이 걸렸다. 독일은 우리보다 1년 빠른(?) 1988년에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시작되었다. 세계 신기록이다.

이렇게 빨리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 정권이 밀어붙인 때문이다.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물가, 소득수준에 걸맞게 보험료는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저렴하게 하고 보장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 수가만 낮추면 되었다. 우리나라의 의료수가는 국가가 정한다. 200만원하는 수술비를 100만원으로 낮추면 보험료는 반으로 줄고 보장율은 3배가 된다. 실제로 그러 했을까 의구심이 들겠지만 1977년 정부가 결정한 의료수가는 관행수가(시중가격의 평균을 가리키는 용어)의 42%정도이고,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38%정도이었다. 충격적이다. 요즘 같은 민주화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하겠지만 그 시절은 검정 선글라스와 군화로 대표되는 유신시대여서 가능하고도 남는 일이었다. 의료계 대표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단지 언제 지켜질지 모를 '의료수가를 점점 현실화 시켜준다는 그 약속이 꼭 지켜지기를 바랍니다.'라는 바보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그 뒤로 30여년이 흘렀다.

이번에도 그랬다. 하지만 이번 싸움에서는 의료수가의 현실화를 액면 그대로 드러낼 명분이 없었다. 그래서 의료수가 결정 권한을 가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구조 개편에 힘을 모아 구조 개편을 이루어 냈다. 현행 3분의 1에 불과한 의료계의 지분을 절반으로 늘렸다. 의료수가를 결정할 때 좀 더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의료계의 요구대로 의료수가 올라가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인데 이걸 가만히 둘리가 없다. 건정심 개정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 되는 순간 민생을 앞세운 야당과 시민단체의 드센 반대가 예상된다. 국민들의 의료계에 대한 불신 또한 엄청나게 커지리라 예상된다.

현 정부는 어떻게 하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역사를 통해 알고 있다. 언론을 이용한 여론몰이, 시민단체의 목소리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해 의료계를 '민생을 무시하고 자기네들의 뱃속만 채우려 의료수가를 인상하려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 의료수가를 지금처럼 원가이하로 유지시키면 끝이다.

정부도 이제는 좀 솔직해 져야 한다. 현 정권의 의료관련공약을 그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30조 이상의 추가 비용이 든다. 간병비, 특진료, 병실료를 보험화하면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고 동네의원은 점점 더 쪼들리고 어려워진다는 점과 원격진료와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하면 결국 보험료는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우리나라는 의료관련 지출은 GDP 대비 8%이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은 16%이다. 총액으로 따지면 2배가 훨씬 넘는다. 이 국가들의 의료지출비는 우리나라의 2배가 넘지만 환자의 자부담 또한 우리나라의 2배가 넘는 45% 정도이다.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국민들도 인정 할 것은 인정해야 하고 고통도 감수해야 한다. 의료계도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파업은 자제해야 한다.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어찌 보면 국민들, 환자들이다. 불편한 환자들을 의료계가 또 불편하게 해서는 안된다. 환자에게는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율 탓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일반 국민들과 시민단체에게는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의료계의 수가인상 요구 때문이 아닌 애초부터 잘못 만들어진 건강보험제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환자 시민단체와 힘을 합쳐 국가와 싸워야 한다. 의사와 환자는 한편이 되어야 한다.

이제는 좀 달라졌다. '싸움의 기술'을 배웠다. 겨우 길모퉁이 한 개 돌았을 뿐이다. 앞으로 갈 길이 더 길고 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부터의 싸움은 과거와는 다른 방법으로 미래를 내다보며 우리나라 의료 발전에 큰 그림을 그려가는 싸움이어야 한다.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기고

지방선거, 지역을 살리는 참신한 인물 선출해야

한 국 환
광주 봉산초 교사
광주시의회 정책네트워크 정책위원

올 6월에 지방선거가 열린다. 단체장, 의원 등 항상 여러 후보가 난립해 참신한 인물을 거의 만나지 못했고, 또한 각종 공약을 내세웠지만 '그 나물에 그 밥'으로 좋은 결과도 얻지 못했다. 즉, 그 지역의 적절한 인물을 뽑지 못했으며, 지역 특성을 살리는 정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몇몇 지자체 외에는 지역발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선거 무용론이 대두 된 지 오래다. 당선자들은 자신의 입신양명만 앞세우고 사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여 부정, 횡령, 탈법, 편법, 외유성 여행, 세비인상 등으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수도권만 있고 지방은 없다'는 식의 정치, 경제, 사회의 정책과 특정지역에 대한 편중된 예산지원, 경제성 논리로 지방은 늘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거에 관심을 갖고자 필자가 알고 있는 한 사례를 보면서 지방선거를 함께 생각해 보자.

열악한 지역 자연환경을 잘 활용한 전북 완주군 한덕마을의 사례를 보자. 한덕마을은 인구는 100여 명이다. 모악산의 작은 산골 마을, 고령화 속에 2010년 주민 50명이 1억 2000만 원을 출자해 마을회사를 설립, 새로운 활기를 찾았다. 마을주민이 단합해 마을의 부가가치를 높인 것이다. 즉 건강과 힐링을 체험하는 한증막, 그리고 전통의 한옥, 황토방, 레스토랑 등을 운영해 연간 1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15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한다. 내용은 그 마을 자원을 활용한 독특한 소득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가공, 판매를 연계해 농업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맑고 깨끗한 청정(淸淨) 산골임을 내세워 전통구들을 이용한 한증막, 전통구들 황토방 등을 세워 도시민을 끌어들였다고 한다. 또한 식당을 운영했는데 마을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해 그들만의 독특한 건강밥상을 개발해 제공함으로써 손님을 맞이했다. 이것들을 맛본 손님들은 감탄하며 자연스럽게 그 마을의 고추, 식염장, 유기농 쌈채소, 전통효소 등 다양한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구매해 수익이 크게 늘어났다. 그리고 농산물은 계약재배 시스템으로 운영해 지역소득을 높였고 건강강좌 등으로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해 부러움을 사고 있다.

그 성공 요인은 생산·가공·판매·체험관광과의 연계이고, 더 중요한 것은 앞장선 리더의 모습과 타 지역과 차별환 된 사업 아이템, 주민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자치단체의 맞춤형 지원을 바탕으로 했다. 결국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방식을 운영하여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산골이라는 열악하고 보잘 것 없는 현재의 가치를 민·관의 협조와 노력으로 타지역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미래의 가치를 창출한 것이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는 우선 그 지역의 자연환경과 물적·인적자원, 유통구조, 도로 항만, 철도 등의 교통인프라 등 사회기반시설(SOC)을 고려하여 어떤 조합을 이뤄야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가를 살펴서 계획을 제시, 주민들을 설득하며 실행해야 성공한다. 뿐만 아니라 다른 곳과 차별된 아이템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해 오는 것도 지방정부의 우선적 과제일 것이다.

요즘 회자되고 있는 지방선거의 후보에 대한 이야기는 인물의 됨됨이와 비전 등 지역을 살리는 정책보다는 정당, 자금과 조직, 출신 지역과 출신학교 등 후보자의 겉포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안타깝다. 그래서 참신한 인물보다는 과대포장하며 '입신양명'만을 노리고 인물들이 많아서 일종의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는 정말 참된 지역 일꾼을 뽑아서 지역을 변화시켜야 한다. 잘못 선출하면 결국 지역사회의 큰 손실이요 지역의 부채로 돌아온다. 국제대회 유치하여 화려한 잔치를 벌여 수입 올리고 그 지역을 마케팅했다고 좋아했지만, 빚을 내서 건설한 시설 비용 및 관리 등 엄청난 부채만을 지역에 떠안기는 단체장이나 지원한 의원 등은 무책임으로 일관한다. 이번 러시아 작은 도시 소치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에서도 빚으로 건설한 시설을 경기 및 손님접대에 활용했지만 그 부채 청산 및 시설의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지가 큰 과제라고 한다.

우리는 후보자와 지연-학연-혈연 등으로 얽매이지 말고 잘 가려서 선출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을 위해 선공후사(先公後私)로 봉사할 인물, 비전이 확실하며 지역민의 힘을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동심협력(同心協力)의 리더십을 가진 참신한 인물을 뽑아야 한다.

社 說

무등산 군부대 이전 차질 없이 추진하라

무등산 정상에 자리한 공군 방공포대 시설 중 교회와 사찰이 올해 안에 철거되고 군부대도 2017년까지 이전할 것이라고 한다. 군부대가 들어선 지 48년만에, 시민들의 정상 회복 운동이 시작된 지 25년 만에 복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전남도와 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는 지난달 31일 지왕봉 아래 사찰(80㎡)과 컨테이너 건물인 교회(70㎡)를 철거하기로 군부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동부사무소는 올해 6000만 원을 들여 두 건물과 계단·옹벽 등 인위적인 시설을 철거하고 지왕봉의 경관을 옛 상태로 되돌리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운태 광주시장도 이날 간부회의에서 "국방부 등과 협의 끝에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전 대상 후보지도 공군본부 실무진과 시 공무원이 6개월 넘게 서해안 일대 10여 곳을 조사해 최적지인 국유지를 찾아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군부대 이전에 드는 300억~500억 원은 국립공원인 만큼 전액 국비로 지원될 것이라며 환경부와 협의해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승인을 얻어 순조롭게 추진되면 2016년 착공해 2017년까지 완료하게 된다.

무등산 최고의 비경인 천왕봉·지왕봉·인왕봉 등 정상 3봉을 포함해 10만 8000㎡에 주둔하고 있는 방공포대는 지난 1966년 이후 군사보호시설이라는 이유로 철조망을 둘러친 채 지역민의 접근을 차단해 왔다. 이로 인해 자연환경도 많이 훼손됐다.

시의 발표대로라면 이제 이전 후보지 확정과 비용 확보가 과제로 남는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전 대상 지자체와 주민을 설득하지 못하면 수포로 돌아가기 십상이다. 무등산 정상 복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온 애드벌룬에 그치지 않으려면 보다 치밀한 전략 아래 차질 없는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운전 중 DMB 시청 단속 말로만 할 건가

운전 중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시청을 처벌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2월14일부터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이 운전자의 DMB 시청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단속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운전 중 DMB와 스마트폰 등 영상장치를 사용한 운전자에게 6~7만 원의 벌금과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단속권이 주어졌지만 현재까지 적발한 차량은 전무하다고 한다. 경찰은 개정안에 따라 2월 말까지 홍보·계도활동을 벌인 뒤 3월1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으나 시기를 미룬 채 막연하게 5월 이후로 잡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별도의 단속장비 없이 움직이는 차량에서 DMB 시청을 가려내기가 어렵고, 신호대기나 정차 중일 때는 단속에서 제외되는데다 유리를 짙게 코팅한 차량이 많아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단속할 수 있는 법적 토대까지 마련한 상황에 뚜렷한 대책이나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변명에 급급한 것은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운전 중 DMB 시청을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것은 그에 따른 사고 위험이 심각하다는 데 있다. 손해보험협회에 의하면 DMB를 보면서 운전할 경우 전방 주시율이 58.1%로 크게 떨어지며, 국내 사망 교통사고의 원인 중 전방 주시 태만이 63%로 신호 위반, 과속, 음주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차량의 대다수가 DMB 수신 기능이 있는 내비게이션 기기를 달고 있는 마당에 대처 방안도 없이 단속을 미루는 것은 더 화를 키울 뿐이다. 경찰은 블랙박스에 찍힌 시청 여부를 확인하는 등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단속 시기를 가능한 빨리 잡아야 한다. 운전자의 인식이 변화하지 않는 한 단속은 불가피하다.

無 等 鼓

살살이 꽃

불로불사(不老不死)는 인류의 영원한 소망이다. 수많은 신화와 전설에는 갈피갈피 이 같은 염원이 서려있다. 대부분은 영생에 실패하고 한 줌 재로 스러지지만, 다행히도 마법이나 신비한 힘을 이용해 꿈을 이루는 경우도 적지 않다.

우리 전통신화에는 '서천꽃밭'이라는 신비한 공간이 등장하는데, 이곳에는 불로불사를 가능하게 해주는 '환생꽃'이 피어있다. 제주신화 '이공본풀이'에는 이 꽃들의 기능이 구체적으로 나온다.

"어머니를 죽인 원수를 갚은 할락궁이가 청대밭에 흩어진 어머니의 앙상한 뼈를 한 데 모아 '뼈살이 꽃'을 뿌리니 뼈들이 절거덕거리며 서로 맞붙었다. 이어 '살살이 꽃'을 뿌리니 뼈 위로 살이 뽀얗게 돋아오르고, '피살이 꽃'을 뿌리니 몸에 발그레 피가 돌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숨살이 꽃'을 뿌리니 맥박이 둥둥 뛰기 시작했다. 때죽나무 회초리로 몸을 세 번 때리니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앉았다."

이들 환생꽃은 자청비가 불한당에게 죽은 남편을 살려낼 때에도, 바리공주가 부모를 살려낼 때에도 어김없이 효능을 발휘한다.

그리스신화에서는 마법과 약초에 능한 마녀 '메디아'가 환생의 기술을 구사한다. 영웅 이아손의 아내이기도 한 그녀가 여러 가지 약초를 솥에 넣어 끓인 뒤 늙은 양을 토막내 집어넣자 솥에서 새끼양이 튀어나왔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다.

또, 여신 헤라는 남편인 제우스와 인간의 딸 세멜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디오니소스를 티탄을 시켜 찢어 죽이지만 할머니 레아 여신이 손자의 조각난 몸을 꿰맞춰 생명을 불어넣는다. 이집트의 여신 이시스도 악신 세트에게 열네 조각으로 찢겨 죽은 남편 오시리스의 몸을 한 데 모아 미라로 만들어 재생시킨다.

최근 일본에서는 논문 조작 스캔들이 터지면서 줄기세포 연구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올 초 획기적인 연구로 노벨상 수상까지 거론되던 일본 줄기세포 연구진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논문을 철회하기로 한 것이다. '일본판 황우석 사태'라는 말까지 나오지만, 영생에 대한 갈증과 연구의 압박이 그만큼 심한 때문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신화 속 '살살이 꽃'이 하루빨리 현세에 피어나기를 기대해본다.

/홍행기 경제부장 redplane@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영지원국	2200-515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서 울 지 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